여수세계박람회 유치 1주년 장승우 위원장에게 듣는다

"박람회 랜드마크 설치 적극 검토"

지난 해 11월 27일 제142차 BIE 총회에서 여수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된 지 27일로 1년이 됐다. 26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1주년 기념식이 열린 여수시 진남종합경기장에서 취임 8개월을 맞은 장승우 박람회조직위원장을 만났다.

장 위원장이 26일 본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내달 2일 BIE 인정 승인 후 국제협력·마케팅 활동 박차

'아쿠아리움' 성패 여부는 크기 아닌 내용물에 달려

-26일로 취임 8개월이 됐다.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나.

▲올해 조직위가 꼭 해야 할 일이 박람회 주제개발 및 전시연출 계획, 박람회장 조성 및 교통·숙박계획, 재정계획 및 사후활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정이다.

기본계획은 25일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했고, 12월 2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44차 BIE총회에서 인정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는 다른 박람회에 비해 6개월~1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BIE인정 이후 여수박람회는 공식적인 참가국 유치가 가능하게 되며, 또한 타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전략적 마케팅 활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박람회 기본 계획과 특징을 설명해 달라.

▲기본계획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종합 기본계획'에는 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 구현을 위한 전시장 시설·운영, 공간구상 및 전시연출 계획 등 종합적인 밑그림이 담겨있다.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조직위를 중심으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획단 운영, 공청회, 지역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총사업비 규모를 유치 당시에 비해 약 22%가 증가한 2조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역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박람회 랜드마크(상징물) 시설 사업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가.

▲조직위도 여수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상징 시설물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박람회 종합기본계획에 한국관 앞을 상징물 설치 위치로 잡았으며, 구체적인 상징물은 전문가와 지역사회로 구성된 조성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상징물은 건물일 수도, 예술품일 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일 수도 있다.

-지역에서는 박람회 사후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3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아쿠아리움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 계획안은 1천억원 내의 민자사업이어서 격차가 큰 데.

▲아쿠아리움은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사후 방문객과 유지 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이 담은 아쿠아리움은 7천㎥ 규모로 코엑스, 부산 해운대, 63빌딩 수족관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크다. 이 정도 규모면 과거 다른 나라에서 엑스포를 계기로 만든 아쿠아리움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규모다. 앞으로 민간 투자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자·운영 주체인 민간 의향에 따라 운영 가능한 합리적인 선에서 규모를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7천㎥ 규모이면 아쿠아리움의 성패 여부는 크기가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 이다. 오키나와 수족관(고래상어·쥐가오리)처럼 수족관을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콘텐츠를 찾아야 한다.

-정부의 지원은 적고 민자사업 규모는 커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자사업 규모를 줄이고 정부 지원을 확대시킬 복안은 있는가.

▲민자 유치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기업과 협의 중이지만 수익성 문제와 최근 금융위기로 기업의 참여의지가 낮은 상태다. 민간의향을 반영해 규모 조정이나 수익모델 창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선벨트사업과 연계한 마케팅을 통해 기업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가 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비와 엑스포타운(종사자 숙소) 조성비용 중 일부에 대해 지방 분담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예산편성과정에 박람회 재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비 분담에 대해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 분담내용을 조직위 차원에서 요구한 적은 없다. 박람회 사업의 지방비 분담문제는 대다수 박람회의 분담 선례와 개최도시의 역할론 등을 고려할 때,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본다. 다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지방비 분담필요성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람회 사후 효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방안은 있는가

▲박람회 기본계획은 여수의 도시발전 비전, 국가 기본정책인 녹색성장과 엑스포 주제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전략 아래 수립됐다. 또한 여수가 선벨트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남해안 선벨트 구상,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계획 등 현재 구상중이거나 추진중인 남해안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현실성있는 여수지역 및 남해안권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 이후 여수를 신해양경제 'ECOpolis : Economy + Ecology + Ocean(경제+환경+해양)'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여수시 장기발전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장승우 위원장 ▲광주 출신 ▲경기고·서울대 졸업 ▲행시 7회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경제기획국장 ▲통계청장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동원금융지주 상임고문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겸 회장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경제·안보 현안 챙기기 분주

靑 수석회의 주재…청년실업 대책 조속 시행 촉구도

이명박 대통령이 11박12일간의 해외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26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 안보 등 국내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G20 금융정상회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과 남미를 순방하고 전날 밤늦게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통상업무를 재개했다.

3시간 이상 계속된 수석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부재중 국내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연말 국회 개혁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비롯한 경제난국 극복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누구보다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청년층 실업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오후에는 외교안보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으로부터 북한의 개성관광 및 남북철도 운행 중단 등 최근 상황과 향후 대책을 브리핑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김형오 국회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번 순방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7일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갖고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연말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연합뉴스

"쌀 직불금 명단 감사원에 송부하겠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밝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쌀 직불금 수령자 105만명의 신분과 직업이 적힌 명단을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에 참석,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의 명단 제출 요구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28만명 명단의 직업별 내역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쌀 직불금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 이사장은 "감사원이 지난달 24일께 명단을 요청했을 때 고유 업무가 아니라 줄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했었다"며 "(명단 제출이) 제 소신에는 반하지만 여야가 농촌을 살리고 국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한 만큼 감사원에 원자료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익 등을 위해 협조해야 할 입장에 있지 제가 이걸 갖고 뭘 하겠느냐. 감사원에 다 제출하겠다"며 "관련없는 부처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감사원에 제출해 처리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